



# 대북정책

이렇습니다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정 부 출범 4년,

국 민의 뜻에 따라

상 호존증과 호혜주의에 입각해

정 상적인 남북관계 구현을 추구해 왔습니다.



## 정부는

북한 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첫째,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문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과거와 현실, 미래를 고려하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우리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의연한 자세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 둘째,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입니다.

또한, 남북간 상호존중과 호혜적 협력관계, 인권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남북관계의 구현을 추구해 왔습니다.

◆ 셋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앞서 열거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북한 도발에 따른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 민간교류의 물꼬를 틔우므로써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넷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였습니다.

과거 정부 시기부터 추진해온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 유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시기 남북교류협력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흡했고, 핵실험 등에 따른 국민적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 남북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6.15/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와 도발이 마침내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라는 무력공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출범초기부터 북한은 일방적 대화중단, 개성공단에 대한 차단, 핵실험 등 강경한 조치를 연달아 취했으며, 더 나아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여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도발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한 응징, 즉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 5.24조치였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남위협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북경협과 대규모의 일방적 대북지원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일관된 정책추진 결과,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고 남북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관계가 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관을 바로 세워 나감으로써 앞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능동적 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관리,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명박 정부 4년,

**국** 민의 뜻에 따라

**남** 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간 상호존중을 목표로,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조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강경 조치와 도발을 해 온 것은 북한입니다.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화를 중단하고, 연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교류 제한·차단, 근로자 억류, 핵실험 등의 긴장 고조 행위를 했습니다.
  - 특히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와 영해를 공격한 무력도발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이를 강경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묵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간다면 정상적인 남북 관계의 구현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 이러한 차원에서 5.24조치 등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 등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남북 간에 우호적인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추구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으며,
  - 이를 위해 북한이 진정성있는 핵폐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그랜드바겐」 전략을 수립, 핵문제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고,
  - 이를 바탕으로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에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비핵화를 요구하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의지가 북한에도 분명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 앞으로도 확고한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통일준비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 통일비용을 차근차근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마음을 “통일항아리”에 모을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의 혜택을 제대로 알게 하는 등 통일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학계·시민사회·경제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예측해보고 주요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 자료로 축적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통일재원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자신감, 책임감이 강화됩니다.
  -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통일준비 의지와 역량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6.15/10.4선언을 포함,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 또한 여러차례 북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 하기도 했습니다.

〈 대통령 18대 국회 개원연설('08.7.11) 〉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가 6.15/10.4선언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 특히, 서울답방 불이행, 도를 넘는 비방중상 등 상호존중 합의 불이행, 핵실험, 무력 도발 등 한반도 평화위협 등의 사례는 북한이 오히려 6.15/10.4선언을 훼손하고 위반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분단 이재민(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정부는 분단 이재민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2차례의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최근에도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분단 이재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후납북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425건, 145억 원의 피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6·25전쟁 납북사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1.12월 말 현재 총 272명을 전시납북자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납북자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여 범정부적 기구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4년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발전 하였습니다.



-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 5.24조치시에도 개성공단 만큼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 활동을 유지시켰습니다.
- 그 결과,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기업이 가동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연간 생산액 4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출범시점인 2008년 2월 가동 기업수는 68개, 고용된 북한 근로자는 23,529명이었습니다.
  - 금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5만 명 고용을 달성하여,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고용된 이후 7년 4개월만에 5만 명 고용을 기록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인력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가 준수되고 건전한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총 2,349억 원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정부 차원에서는 신의주 수해지원, 신종플루 치료제, 의약품 등 재해 및 보건의료 분야에 9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민간차원에서도 자체 재원을 통해 의약품, 생필품 등 총 1,387억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또한 지원물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 들에게 우리의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되어,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난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5.24조치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며, 국가의 기본 책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 대한 도발을 지속해왔습니다.
  - 특히 2010.3.26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켜 우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 이에 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하는 「5.24조치」를 발표(2010.5.24)하였습니다.
  - 당시 국민들의 63.9%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지지 했습니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46명이나 희생됐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은 국가로서의 태도가 아니며 국민으로서도 용납 되지 않은 것입니다.
- 그간 정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5.24조치」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종교·체육·예술 등의 분야에서 순수한 교류를 허용함으로써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